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contents



이주의 초점

1.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관세·무역 NEWS

2. 中, 산업 자주화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

3. 무역위, 중국産 H형강에 반덤핑관세·가격약속 5년 연장

4. 바이든 新행정부 통상정책 '국내 경제 재건 및 동맹 협력'

5. 특명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사수하라"

6. K-방역제품 수출 전년대비 2,989% 폭등 中企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급부상

7. 2021년 해외시장별 진출전략과 지원방안



개정법령

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9.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10.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Cover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 I

이주의
초점

탄소 못 줄이면 수출길 막히는 시대 ... '韓, 탄소 악당' 오명 벗어나

1월 20일 美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다시금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 열풍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복귀 등 친환경 정책을 앞세운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ESG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관세·무역
NEWS

ESG는 기업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평가하는 비(非)재무적인 지표인 셈이다. 해당 기업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는지가 아닌,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개정
법령

그동안 기업은 ESG보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집중해왔다. ESG를 'CSR의 연장선' 혹은 'CSR이 진화한 개념' 정도로 취급해온 게 사실이다.

민원
사례

당장 수익이 되지 않는 환경(E)이나 지배구조(G)까지는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일종의 마케팅 도구로서 '착한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사회적 책임(S) 정도만 챙긴 것이다.

기타

Cover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 II

이주의
초점

◆ ESG의 시초와 현주소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각국 정부들은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고, 이 과정에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졌다.

자연스레 ESG와 궤를 같이 하는 탄소 배출 감소, 공기질 개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

관세·무역
NEWS

지난해 1월 세계 최대 규모 자산운용사 블랙록(BLK, Blackrock)의 CEO 래리 핑크(Larry Fink)는 "ESG 성과가 나쁜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최근엔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까지 전체 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정
법령

앞서 2006년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은 연기금들이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투자 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을 마련했는데, 이것이 ESG 투자의 시발점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유럽은 당장 올 3월부터 역내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한다. 은행, 보험, 연기금,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등 고객 자금을 관리하는 모든 회사가 대상이다.

민원
사례

국내 주요 기업도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새해부터 삼성, SK 등 제조업 기반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고, 네이버, 카카오 등 IT 기업도 인권을 비롯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기타

Cover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 III

이주의
초점

특히 네이버의 경우 ESG 위원회 등 전담조직까지 설치하며, ESG를 회사 전체적인 이슈로 끌고 가는 분위기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2025년부터 ESG 활동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관세·무역
NEWS

이처럼 돈과 경제의 흐름을 관장하는 각국 기관들이 ESG를 예의주시하는 만큼,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개정
법령

◆ E·S·G 중 'E(환경)'가 맨 앞에 놓인 이유

자칫 ESG에 집중하다 수익성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민원
사례

하지만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회사는 친환경과 수익성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 사례가 됐다. 친환경과 수익성은 결코 교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사실 자연은 모든 상품의 재료다. 기업과 사회는 이 자연이라는 생태계에 의존·의지하고 있다.

기타

Cover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 IV

이주의
초점

최근 세계경제포럼(WEF)과 PwC(Pricewaterhouse Coopers)가 함께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지구 생태계 상품·서비스에 전 세계 GDP 절반에 달하는 44조 달러(5경 1,062조원)가 달려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자연이 망가지면 이 44조 달러도 증발하는 셈이다.

기후 변화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메뚜기 떼가 파키스탄을 넘어 중국 국경에 이르렀다. 빙하는 녹아내리고 멸종하는 동·식물도 해마다 늘고 있다. 너무 흔해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수많은 생명체들도 머잖아 동·식물도감에서나 볼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관세·무역
NEWS

최근 삼성물산은 석탄 신규 사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고, 한화그룹은 분산탄 사업을 따로 분리했다. 분산탄은 넓은 지역에 파편을 뿌리는 무기인데, 유럽은 분산탄을 비인도적 무기로 지정했다. 관련 무기를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환경'을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더 이상 기업들은 ESG를 일종의 마케팅 도구나 이미지 메이킹 수단으로 취급할 수 없다.

개정
법령

사실 국내 기업이 ESG에 집중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투자 유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 신규 사업에도 지장을 받는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ESG 점수가 낮으면 투자받기가 어려워져 ESG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민원
사례

투자자 입장에서 석탄, 무기 개발, 도박, 담배 제조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거르고, 사회나 환경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ESG에 소홀한 기업으로 낙인 찍혔다가는 주가 폭락 등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

꼭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도 모든 사회구성원들은 E·S·G 중 'E(환경)'가 맨 앞에 놓인 이유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기타

Cover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 V

이주의
초점

◆ 탄소 못 줄이면 수출길 막히는 시대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5위를 기록했다. 산업 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6%를 차지했다.

관세·무역
NEWS

최근 美 조 바이든 대통령이 탄소조정세(carbon adjustment fee)를 거론하는 등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다.

탄소조정세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인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개정
법령

EU집행위원회는 구체적으로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준비하고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중 탄소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 분야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 계획을 확정하고 2023년 실행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민원
사례

EU집행위는 탄소 함량이 높은 제품 중 외국산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안 또는 역내외 생산 제품에 모두 탄소세를 부과하는 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내 기업에 적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수입 제품에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각국이 탄소세를 도입하면 당장 우리 자동차·철강·항공산업 등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기타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 VI

◆ ESG, 피해 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미국 나스닥은 최근 새로운 상장기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상장기업 이사회가 최소 2명의 이사를 여성, 성소수자, 소수 인종 등의 계층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나스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처럼 ESG는 날로 구체화·세분화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기업의 ESG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한 가지 다행인 사실은 선진국 기업 역시 ESG 경영의 역사가 길지 않고, 일부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의 꾸준한 정책과 투자가 동반된다면 우리 기업의 ESG 수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1월 18일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스위스, 뉴질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싱가포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맨섬(Isle of Man)이 ESG 신용영향점수(CIS)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부 분야별 평가(IPS)에서 '환경' 2등급(중립적), '사회' 2등급(중립적), '지배구조' 1등급(긍정적)을 획득해 종합적으로 'ESG 신용영향 점수(CIS)'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긍정적)으로 평가 받았다.

피해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우리 'ESG'의 현주소는? - VII

이주의 초점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 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국판 뉴딜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SG는 피해 갈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다. 앞으로는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 외에 기후 환경 리스크, 인권, 안전 등 환경 성과와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등의 주요 지표도 관리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성패를 가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무역 NEWS

【 Moody's ESG 신용영향점수 관련 세부 항목 】

분야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전환 - 기후 변화 - 수자원 관리 - 폐기물 및 공해 - 자연 자본(토지, 숲, 생태 다양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노동 및 소득 - 교육 - 주거 - 보건 및 안전 - 기본 서비스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구조 -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 투명성 및 정보 공개 - 예산 관리

개정 법령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Cover

中, 산업 자주화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 - I

이주의
초점

첨단 설비·부품, 친환경 제품과 일부 소비품에 저관세율 적용

중국정부는 '국내 대순환 위주, 국내외 순환 상호 촉진'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중국 내 소비수요가 활발하고,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제품의 수입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해당 관세 방안은 중국정부의 ▲내수 확대, ▲산업 고도화, ▲산업 자주화, ▲녹색성장 등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산업 고도화를 위해 하이테크 설비·부품, 의료기기 등 제품의 관세를 인하한 바 있다.

개정
법령

특히 올해 산업 자주화를 위해 타이어, 광섬유용 도료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 중국 수출입 세칙의 세목 수는 전년도보다 31개 증가한 8,580개로, 대서양 연어, 사탕수수·사탕무의 당액, 흑차, 유전자 측정기 등의 세목이 추가됐다.

민원
사례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스테인리스 슬래브 압연, 발광 다이오드 등의 세목이 별도 분리됐으며, 크림, 무청, 파파야, 필터 등 상품명, 주석 등이 수정됐다.

기타

Cover

中, 산업 자주화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 - II

아울러 병어, 낙엽송, 스노보드 등의 세목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세목 조정이 이뤄졌다.

이주의
초점

이어 올해 883개 품목(품목 유형 기준)에 대해 최혜국 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한다.

전년대비 잠정세율 적용 품목 수가 24개 늘어났는데, 주로 중국 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소비품, 의료기기, 하이테크 관련 설비와 부품 그리고 친환경 제품들이다.

특히 올해는 환경보호를 위해 6종 금속 스크랩, 담배 등 제품을 잠정관세 적용 품목에서 제외하고 폐기 재순환 밸브 등 친환경 제품이 관세는 인하했다.

목재와 종이 등 자원 소모형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관세를 적용한다.

또한 전년대비 잠정세율 적용품목에 총 47개 품목이 신규 추가됐다.

항공기 엔진 부품, 항공기용 소화기 등 항공기 관련 품목(총 16개)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잠정세율을 적용했던 42개 품목은 올해부터 제외된다.

이 중 광섬유용 도료, 타이어, 금속 스크랩, 펌프 등 38개 품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잠정세율 적용을 중단한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Cover

中, 산업 자주화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 - III

이주의
초점

이들 제품은 올해부터 최혜국 세율이 적용돼 지난해보다 관세율이 높아진 셈이다.

반면 프린터와 고속(200km/h 이상) 교류 견인 변압기는 최혜국 세율을 지난해 잠정세율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 WTO 정보기술협정(ITA) 이행에 따른 IT 관련 수입품의 최혜국 세율도 조정했다.

중국정부는 2016년 9월부터 ITA에 따라 일부 IT 수입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을 낮춘 바 있다.

올 7월 1일부로 6차 관세 인하를 시행할 예정이며, IT 제품·반도체 및 관련 생산설비·시청각 제품·의료기기 등 176개 IT 제품에 대한 최혜국 세율을 한차례 더 낮춘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

더불어 보리 등 농산품과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 수입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한다.

민원
사례

중국은 할당량 이내 보리, 옥수수, 쌀, 설탕, 양모, 카드한 양모(Carded wool), 면, 화학비료에 대해 1~15% 수준의 할당 관세를, 할당량 이외는 40~65% 수준의 MFN 세율을 적용해 왔다.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대해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기타

Cover

中, 산업 자주화 위해 일부 품목 올해부터 잠정관세율 적용 중단 - IV

이주의
초점

활준관세는 물품의 수입가격이 인상되면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인하되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관세로, 수입품의 국내 가격 안정, 수급 균형 유지를 위해 부과한다.

올해 면의 할당량 이외 수입 관세율을 낮췄는데 활준세율이 13.7%에서 10.7%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할당량 이내의 요소, 복합비료 등 3종 화학비료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은 4%다.

관세·무역
NEWS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27개국에서 생산한 일부 수입 제품에 대해 협정세율을 계속해서 적용하며, 올해는 한·중 FTA 발효 7년 차로 협정에 따라 관세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법령

KOTRA는 “중국 소비자의 날로 향상되는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코로나19 사태로 막힌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소비품 관세 인하, 통관 효율화 등 조치는 지속 발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정부는 소비품 관세 인하, 통관 효율화 등의 조치를 계속해서 발표·시행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 수출기업은 중국정부의 정책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따라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원
사례

기타

【 전년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

HS Code	상품	2020 MFN(%)	2020 잠정(%)	2021 MFN(%)	전년 대비
2403.9100	재구성한 담배	57	40	57	▲
2710.1919	탄화수소 (C9~C13)	6	6	6	▲
2905.1210	프로필 알코올	5.5	3	5.5	▲
3208.2010	광섬유용 도료 (주 성분 : 폴리우레탄 아크릴류 화합물)	10	6	10	▲
3208.9010	광섬유용 도료 (주 성분 : 우레탄 아크릴류 화합물)	10	6	10	▲
3210.0000	광섬유용 도료	10	6	10	▲
3403.1100	피혁 등 자재 처리제	10	6	10	▲
3403.1900	윤활제	10	6	10	▲
3403.9100	피혁 등 자재 처리제 (광물유 미포함)	10	6	10	▲
3907.4000	폴리카보네이트	6.5	3	6.5	▲
4011.2000	타이어(단면 30인치 이상)	10	8	10	▲
4011.7010	타이어(단면 24인치 이상)	17	8	17	▲
4011.8012	타이어(단면 24인치 이상)	17	8	17	▲
4011.9010	타이어(단면 30인치 이상)	17	8	17	▲
4805.9110	1㎡당 중량이 150g 이하인 종이/판지	6	5	6	▲

【 전년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

이주의
초점

HS Code	상품	2020 MFN(%)	2020 잠정(%)	2021 MFN(%)	전년 대비
7002.3900	광통신 마이크로레이팅 모듈의 유리모세관, 위치추적관(외경<3mm)	12	3	12	▲
7011.2090	디스플레이 튜브용 유리외피	10	6	10	▲
7104.9012	사파이어 라이너	4	1	4	▲
7204.1000	주철 스크랩	2	0	2	▲
7204.3000	주석도금철 스크랩	2	0	2	▲
7204.4100	기계가공 중 생산된 폐기물	2	0	2	▲
7503.0000	니켈 스크랩	1.5	1	1.5	▲
7606.1129	비합금 알루미늄직사각형판 (0.3mm≤두께 < 0.36mm)	6	4	6	▲
7607.1900	알루미늄 박	6	3	6	▲
7902.0000	아연 스크랩	1.5	1	1.5	▲
8103.3000	탄탈륨 스크랩	6	0	6	▲
8413.5010	기동형 피스톤 펌프	10	6	10	▲
8413.5020	전동형 피스톤 펌프	10	6	10	▲
8413.5039	기타 액압식 피스톤 펌프	10	6	10	▲
8413.5090	기타 피스톤 펌프	10	6	10	▲
8413.6029	기어 회전펌프	10	6	10	▲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 전년대비 삭제한 잠정수입관세율 적용 품목 】

HS Code	상품	2020 MFN(%)	2020 잠정(%)	2021 MFN(%)	전년 대비
8413.6031	전동식 회전 펌프	10	6	10	▲
8413.6090	기타 회전 펌프	10	8	10	▲
8413.9200	액체 엘리베이터 부품	6	4	6	▲
8443.3110	프린터	상반기 3.3	상반기 3	1.7	▽
		하반기 1.7			
8443.9190	기타 인쇄보조용 기기	상반기 2	상반기 1	1	-
		하반기 1			
8446.3050	에어제트방적기 (넓이 > 30cm)	8	3	8	▲
8479.4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7	5	7	▲
8501.5300	고속 (200km/h 이상) 교류 견인 전동기	10	3	10	▲
8504.4099	고속 (200km/h 이상) 교류 견인 변압기	상반기 3.3	상반기 3	0	▽
		하반기 1.7			
8540.9190	기타 음극선관 부품	8	4	8	▲
9031.8033	와류탐상 측정기	상반기 4	상반기 3	3	-

Cover

무역위, 중국産 H형강에 반덤핑관세·가격약속 5년 연장 - 1

이주의
초점

- 中 옽셋인쇄판 반덤핑관세 연장
- 中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심사는 반덤핑조사 개시

무역위원회가 중국産 H형강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와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1월 21일 제408차 회의를 열고 중국産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덤핑방지 조치를 5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참고로 H형강은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쓰인다. 가격약속은 덤핑물품의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격을 인상해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라이우스틸, 르자오스틸, 안타이스틸 등 3개社에는 원심 시 가격약속 수준을 유지하고, 3개社를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 대해선 향후 5년간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하면 기재부장관이 조사 개시일(지난해 4월 3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무역위는 중국産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옽셋인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코닥, 화광, 보시카 등의 중급 공급자에는 10.32%, 이들을 제외한 기타 공급자에는 8.78%의 반덤핑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할 것을 기재부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Cover

무역위, 중국産 H형강에 반덤핑관세·가격약속 5년 연장 - II

이와 함께 무역위는 중국産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주의
초점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는 테레프탈산(TPA)과 모노에틸렌글리콜(MEG)을 중합해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로 직물, 편물 등의 의류와 커튼, 침구류 등 비의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소재로 사용된다.

관세·무역
NEWS

무역위는 WTO 반덤핑협정과 국내 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바이든 新행정부 통상정책 '국내 경제 재건 및 동맹 협력' - I

對中 견제 수단으로 통상동맹 확대 ... 美 산업 보호 기조 유지할 듯

이주의
초점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통상정책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가치를 기반으로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대외적으로는 '동맹 협력을 통한 리더십 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무역
NEW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월 21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달리 대기업 위주의 이익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 해소, 규범 중심(rule-based)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 재건,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
법령

◆ 中 견제 위해 동맹국과 협력 강조 ...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선 협력 가능성 시사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무역, 투자, 기술, 공급망 관련 동맹국 간 연합 전선을 구축하는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민원
사례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美·中 갈등이 통상에서 외교로, 양자 차원에서 다자 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타

Cover

바이든 新행정부 통상정책 '국내 경제 재건 및 동맹 협력' - II

이주의
초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중국과의 관계 정립 가능성은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 또한 미국 대선을 전후해 미국을 겨냥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으며 미국의 對中 강경책에 대응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일례로 중국이 올 1월 발표한 '외국 법률·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조치방법'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자국 외상투자 기업에 화웨이 수출 통제 등 미국 법에 따른 견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향후 對中 정책은 트럼프 정권의 안보 위협에 근거한 각종 통상 조치 차원에서 벗어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 연합 구축 등 외교적, 다자적 접근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에 우리 기업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미국과 중국이 연계되는 공급망상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령

◆ 협력 회복 위해 트럼프 행정부서 취했던 통상현안이 해결 과제

민원
사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취한 각종 통상 조치와 기타 통상현안을 해결해야 할 것 보인다.

기타

Cover

바이든 新행정부 통상정책 '국내 경제 재건 및 동맹 협력' - III

이주의
초점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입품에 관세 및 쿼터를 부과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가 지속될지가 업계의 큰 관심사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232조와 관련된 신규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강에 대한 제232조 조치를 지지하는 자국 업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부과된 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관세·무역
NEWS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오랜 동맹인 'EU와 신뢰 회복·협력 강화'를 무역정책의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양측을 둘러싸고 있는 ▲항공기 보조금, ▲디지털 서비스세 등을 둘러싼 보복관세 부과, ▲기후변화 대응, ▲중국에 대한 대응 등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법령

◆ 미국 내 산업 보호 기조 유지 ... 국내 경제 회복 후 신규 무역협상 추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회복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 또한 당분간 국내 산업 보호 요구에 의한 무역구제조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사례

이에 경기회복을 위해 내세운 미국산 우선 구매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은 트럼프 정권 기조와도 동일하며,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도 새로운 행정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Cover

바이든 新행정부 통상정책 '국내 경제 재건 및 동맹 협력' - IV

이주의
초점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기업들의 대응비용이 높고 연례재심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미국 내 경쟁기업의 움직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규 무역협상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경제 회복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영국, 중국, 케냐 등과의 무역협상은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며, 2017년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 여부도 현재 미지수다.

관세·무역
NEWS

향후 신규 협정을 추진하더라도 시장 개방에 방점을 둔 기존의 무역협정 형태에서 무역이 노동,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협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특명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사수하라” - I

이주의
초점

선진국 vs 개도국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관행 폐지’ 둘러싼 의견 대립

현재 무관세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관행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월 18일 발간한 ‘K-POP과 K-웹툰에 관세를?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 필요성을 알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1998년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을 통해 디지털 음원·전자책·동영상·비디오게임 등 디지털 제품의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무관세 관행에 처음 합의한 이후 이를 2년마다 자동 갱신하며 현재까지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최근 재점화되면서 모라토리움이 국가 간 무역협상의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다. 미국·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무관세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지지하는 반면, 인도·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개도국은 영구화를 반대하거나 모라토리움의 폐지를 주장하며 갈등의 양상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 구도로 확대됐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Cover

특명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사수하라” - II

이주의
초점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현 관행 유지 시 얻는 경제적 손해가 크고 손실은 미미한 반면, 개도국의 주장대로 모라토리움을 폐지할 경우 우리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해외시장에서 관세장벽에 노출되고 차별적 대우를 받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우리 정부가 나서서 최근 활발히 진행중인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 등 향후 무역협상에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라토리움의 영구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무역
NEWS

I. 무관세 모라토리움 논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WTO는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2년마다 연장하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개정
법령

그러나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를 앞두고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연장돼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민원
사례

모라토리움은 애초에 전자적 전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 적용 대상 등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입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특히 점차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증가하고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모라토리움의 연장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기타

Cover

특명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사수하라” - III

이주의
초점

II. 개도국 - 모라토리움 영구화 반대 입장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대 입장을 살펴보면, 모라토리움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현 무관세 관행은 충분한 논의 없이 시작됐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세는 개도국에게 중요한 재정수입원이며, 자국 내 IT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개도국에게는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인 관세 부과가 필요한 것이다.

UNCTAD는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선진국의 세수 손실이 2억 9,000만 달러에 불과한 반면, 개도국의 세수 손실은 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

III. 선진국 - 모라토리움 영구화 찬성 입장

선진국은 모라토리움으로 인한 수입국 정부의 세수 손실은 미미한 반면, 생산성 향상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므로 모라토리움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민원
사례

모라토리움 폐지는 자국 내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려는 보호주의에 불과하고, 국경 간 거래가 저하되면 기타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며, 폐지를 대신해 부가가치세나 재화용역세 등 비차별적인 내국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타

Cover

특명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을 사수하라” - IV

이주의
초점

IV. 모라토리움이 우리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모라토리움 유지 시 재정 손실은 미미한 반면,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국내 소비자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재정 손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무역
NEWS

전 세계적으로 K-Pop, 웹툰, 게임 등 K-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2019년 국내 콘텐츠산업과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각각 103억 9,000만 달러와 13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대부분의 K-콘텐츠가 디지털 제품의 형태로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모라토리움이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개정
법령

일부 개도국의 주장대로 모라토리움이 폐지되면 우리 디지털 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관세장벽에 노출되고 각종 차별적인 조치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민원
사례

우리나라가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WTO 복수국 간 전자상거래 협상과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에서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를 관철해 콘텐츠 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CUSTRA

기타

Cover

K-방역제품 수출 전년대비 2,989% 폭등 中企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급부상 - I

이주의
초점

중기부, 2020년 중소기업 수출 동향 및 특징 발표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특히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해 대내외 충격 속에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무역
NEWS

수출 반등의 원인으로 K-방역제품과 '홈코노미(Homeconomy)' 관련 비대면 품목 수출의 약진 및 온라인 수출 호조세 등이 주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진단키트가 포함된 품목인 기타 정밀화학제품과 의약품이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최초로 진입하는 등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개정
법령

중소벤처기업부가 1월 19일 발표한 '2020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및 특징'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008억 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하며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 수준의 수출규모(1,009억 달러)를 유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우리나라 총수출을 견인했으며, 특히 하반기와 4분기 수출반등을 이끌어 대내외 충격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민원
사례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수출은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며 9월에 19.1% 증가한 후, 11월에 12.1% 증가한 데 이어 12월에도 14.0%로 증가세를 확대했다.

기타

Cover

K-방역제품 수출 전년대비 2,989% 폭등 中企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급부상 - II

이주의
초점

특히 12월 수출은 중소기업 수출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 수출액 최고치인 105억 9,000 달러를 기록했고, 4분기 수출도 역대 최고 분기 수출액인 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선전하며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최근 3년 이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8월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4분기에는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이 이같이 선전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K-방역제품과 홈코노미 관련 비대면 트렌드 유망품목 수출의 약진, 온라인 수출 호조세 등을 꼽았다.

먼저 K-방역제품 중 진단키트의 경우 전세계 179개국으로 수출되면서 수출이 전년대비 2,989% 폭증했다.

이에 따라 진단키트가 포함된 품목인 기타 정밀화학제품(PCR 방식) 및 의약품(신속 항원 방식)이 각각 중기 수출 상위품목 7위(2019년 50위)와 9위(45위)를 기록해 수출 상위 10대 품목에 최초로 진입하며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급부상했다.

또한 디지털장비 등 비대면 트렌드 유망품목도 호조세를 이어가며 연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했다.

아울러 한류 확산으로 인한 K-뷰티의 인기와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인한 세계적인 반도체투자 확대 등이 중소기업의 주력시장 다변화에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Cover

K-방역제품 수출 전년대비 2,989% 폭등 中企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급부상 - III

이주의
초점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고 신산업·신품목 수출이 북미·유럽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중국과 ASEAN 등 개도국 중심의 기존 중기 수출시장 구조가 다변화되는 진전도 있었다.

먼저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인기가 높아지며 미국·캐나다·유럽지역으로의 화장품 수출이 하반기 이후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BTS 등 우리 가수의 인기에 힘입어 미국으로의 음반·영상물 등 수출이 38.6% 급증했다.

또 스웨덴·헝가리 등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증설되며 국내산 소재·장비 수출이 늘어 해당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기존 중소기업 수출 주력 제품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및 평판DP 제조용 장비 등도 호조세를 보였다.

또한 온라인 수출의 활성화는 수출 규모도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에 더해, 관련 수출기업과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저변을 확대하며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난해는 중소기업이 고무적인 모습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위기에 강한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지난해 K-방역제품, 비대면품목 및 온라인 수출 등의 증가세가 없었을 경우 중소기업 수출도 전체 수출(-5.4%)과 유사한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기부는 또 지난해 하반기에 강하게 나타난 우리 기업의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Cover

K-방역제품 수출 전년대비 2,989% 폭등 中企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급부상 - IV

이주의
초점

세계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해 부진했던 중소기업 주력 품목(자동차 부품 등)의 회복 추세가 기대되고, 진단키트를 비롯한 코로나19 관련 유망품목의 수요도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해외수요의 감소 또는 환율변동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수출활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세·무역
NEWS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CUSTRA

Cover 2021년 해외시장별 진출전략과 지원방안 - I

뉴노멀 수요, 주요국 경기부양책 대응, O2O 활용 등 제안

이주의
초점

올해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코로나19 백신 보급, 보복소비 심리 작용으로 인해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KOTRA가 해외지역 본부와 함께 올해 해외시장별 전망과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KOTRA는 1월 18~19일 이틀간 '2021년 해외지역본부장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해외시장별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해외지역 본부장들은 ▲코로나19 뉴노멀 수요 대응, ▲이동제한으로 급성장하는 e-Commerce 플랫폼 진출, ▲주요국 경기부양책을 활용한 디지털, 그린뉴딜 분야 진출, ▲GVC에 대응한 소·부·장 해외진출 및 첨단산업 투자유치 방안 등 권역별 특성과 시장 기회를 반영한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국은 개방형 내수진작을 일컫는 '쌍순환' 전략을 추진 중으로 디지털·소비재·유통·의료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가 예상되며, 유럽지역은 그린모빌리티·수소경제 등 친환경 분야와 5G 등 디지털 설비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북미지역은 미래차·의료바이오·ICT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가능성, 동남아는 RCEP 발효와 GVC 재편에 따른 기회, CIS·중동은 유가회복에 따른 소비회복 가능성 등이 주목된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Cover 2021년 해외시장별 진출전략과 지원방안 - II

이주의
초점

◆ 중국, 프리미엄 소비재·의료바이오 분야 O2O 지원 확대

중국정부가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시장과 상호 순환·촉진하는 '쌍순환' 전략을 내세운 가운데, 중국경제는 수출과 투자 회복으로 올해 8~9%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장 및 발전전략은 디지털·소비재·유통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에 시장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KOTRA 중국지역본부는 프리미엄 소비재·의료바이오 분야 등에서 O2O(On-line to Offline)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의 디지털 구조전환과 연계한 新SOC 분야 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

◆ 유럽, 그린·디지털·의료바이오 분야 시장 확대 집중

유럽 지역은 EU경기회복기금 7,500억 유로 투입이 본격화되고, 디지털·그린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유럽 지역 오프라인 매출은 1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30% 증가해 디지털 분야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민원
사례

그린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플라스틱세, 탄소국경세 도입 등 친환경 규제 강화도 이어지는 등 그린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Cover 2021년 해외시장별 진출전략과 지원방안 - III

이에 따라 KOTRA 유럽지역본부는 그린·디지털·의료바이오 분야의 시장 개척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주의
초점

◆ 북미, 마케팅 채널 다양화 및 미래 신산업 분야 협력 확대

북미 지역은 지난해 12월 14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올 1월 14일까지 970만명이 접종을 완료해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구호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는 3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하고 1조 9,000억 달러 규모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비 측면에서는 미국 연말 온라인쇼핑 규모가 1,900억 달러로 전년대비 32%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

이에 따라 KOTRA 북미지역본부는 소비재의 온·오프라인 융복합 사업 확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마케팅 채널을 다양화하고, 미래차·의료바이오·ICT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

◆ 동남아, GVC 재편 및 뉴노멀 수요 집중 공략

동남아대양주 지역은 베트남, 호주 등의 코로나19 방역 성공과 GVC 재편 수혜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나라로 평가받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 6.7%로 전망되고 있다.

기타

Cover 2021년 해외시장별 진출전략과 지원방안 - IV

이주의
초점

ASEAN 각국이 소재·부품 산업 육성, RCEP 타결, 美·中 무역분쟁에 따른 대체생산기지로서 가치가 더욱 커진 가운데, KOTRA 동남아 대양주지역본부는 자동차·조선해양·그린 분야 등 가치사슬에의 신규 진입과 홈코노미(Homeconomy)·소비재·진단방역 등 코로나19에 따른 뉴노멀 수요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CIS·중동, 유가회복 따른 소비회복 기대

지난해 20% 이상 하락했던 유가가 50달러 후반대로 회복되면서 CIS(독립국가연합)와 중동지역 산유국 중심의 경기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KOTRA CIS지역본부는 홈코노미·ICT·그린·의료바이오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으며, 중동본부는 의료건강·식량안보·제조업 자립·민생안정 등 현지 정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법령

올해 세계경제 회복 속도는 '바이드노믹스' 효과, 美·中 분쟁 양상,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겠지만 역시 최대변수는 코로나19 불확실성이다. 백신 보급 속도와 부작용 정도를 아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원
사례

KOTRA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시기를 올해 상반기, 3분기, 연말 3단계로 가정하고, 백신 보급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정상화 시기도 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시나리오에 맞춰 대면·비대면 수출투자지원 사업의 비중을 조정하고, O2O 접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CUSTRA

기타

Cover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1420호, 2021. 1. 27.,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최근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선한 계란, 보존처리·조리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에 대해 2021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법제처

Cover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826호, 2021. 1. 22., 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관세·무역
NEWS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4호, 2017. 6. 2.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0년 6월 1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개정
법령

민원
사례

출처 — 기획재정부

기타

Cover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669호, 2021. 1. 25., 일부개정]

이주의
초점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을 위한 제출서류 및 인증요건을 간소화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거나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을 받은 자는 영업 개시 또는 인증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정기 교육훈련을 받도록 그 교육시기를 개선하며,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와 관련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도입하고, 축산물의 기준·규격 위반 등에 대한 신고·고발 사건에 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이 있는 이후에도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

기타

출처 — 법제처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등

